

<화학산업의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 “ 부정 · 부패의 고리를 단절하자”

97년의 벽두는 참으로 시끄러운가 보다.

96년말부터 시작된 안기부법 · 노동관계법의 날치기 후휴증이 97년 새벽을 암울하게 하더니, 97년1월이 다가기도 전에 또다시 「한보 특혜대출」로 온나라가 떠들석하다. 아니 떠들석한 것을 넘어 나라안이 온통 벌집 쭈서놓은 듯 뒤숭숭하기 이룰데 없다. 어찌하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까지 한숨스러운 지경으로 빠져들게 되었는가.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사회개발 및 공업화에 따라 60-80년대를 거치면서 그동안 수많은 부정과 부패, 비리사건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후진국 신세를 면하는 과정에서 어찌할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요악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본을 집중화시킬 수 밖에 없었다는 순진한 생각과 그 산물이 오늘의 경제주역인 「재벌」로 성장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까지 온국민을 「애처롭게」 하지는 않았었다.

특히, 30여년간 계속돼온 군사정권 아래서는 개발독재의 잔재이거나 생각하고 참고 또 참을 수 밖에 없었으나, 문민정부라는 기치를 걸고 탄생한 현정권이 군사정권을 뺏치는 대형 부정부패를 막지 못하고, 아니 막지못한 것이 아니라 고위층이 스스로 부정부패의 선봉에 서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강도질」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말았으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만 것이 아니겠는가.

연간 매출이 3000억-4000억원에 불과한 한보철강을 대상으로 5조원이 넘는 은행대출이 이루어졌다는 자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거니와, 대출금액이 자본금의 수십배에 이르고, 은행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대출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목적」을 미루어 짐작케 하고 있다.

그것도 경쟁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미 연구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이를 무시하고 5조원을 퍼부은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이다. 한보철강은 93년 7267억원이던 여신규모가 94년 1조5051억원으로 2배를 넘고, 부실화가 예견된 이후에도 95년 2조6064억원, 96년 4조942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을 보면 분명 알파한 「의도」가 있는게 틀림이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지경이다.

결국, 한보철강을 비롯 계열사들은 법정관리로 결말날게 뻔하게 됐고, 중소 하청기업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1조원의 자금을 풀었으니 이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 난맥상을 연출한게 아니고 무엇인가. 바로 국민의 세금, 국고를 「강도질」한 것이다. 은행감독원의 경고나 은행 내부의 반발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이해할 수 없는 「5조원 특혜」의 정체인 것이다.

3공화국 시절 막강한 실세를 누렸던 어떤 인사는 뇌물을 추궁하고 지탄하는 여론에 놀려, 공업화와 정에서 의례히 따라 다니는 필요악이라고 강변, 「떡고물」 논쟁을 펼친 바 있다. 특혜를 주었는데 그만한 대가는 당연한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는만큼 「떡고물」을 만지는 정도를 가지고 크게 탓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그러한지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떡고물」과 「날강도」는 어떻게 다른가. 순전히 똑같은 말이요, 똑같은 뜻을 가졌건만 표현을 달리했을 뿐이다. 또 「떡고물」은 수동적인 의미가 강하고, 「날강도」는 능동적인 행태일 따름이다. 수동적이라는 점과 능동적이라는 차이 때문에 내용이 달라지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같이 특혜를 대가로 받아서는 아니될 「뇌물」을 받았거나 강요해 빼앗았을 뿐인 것이다.

공무원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떡고물」과 어떻게 다른가. 그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액수」의 차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치권이나 고급공무원, 은행장 등은 「뇌물」의 액수가 커 사회적 지탄의 강도가 더 클 뿐이지, 일반 공무원들이 의례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뇌물」도 액수가 적다 뿐이지 그 성격은 매일반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일반공무원들이 받는 「뇌물」은 일상적이지요, 특정한 압력이 아니더라도-물론 특정사안이 발생하면 압력에 비례해 그 액수가 커지는 것은 사실이나-상시적으로 받쳐야 하고, 또 으레히 받는 성격이라는-일부에서 「촌지」라는 말로 표현해 「뇌물」이 아니라는 뜻으로 주장하지만 「뇌물」이기는 마찬가지-차이가 있을 뿐이다.

「먹고 먹히는」「받아서 상납하는」 부패의 사슬을 끊지않고 방치할 때 국가의 운명은 결정났다고 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7/2/3.10>